

지방대학 육성과 인적 자원 계획

이 용 우 | 단국대학교 총장

I. 교육정책의 무계획이 불러온 문제

국가발전의 근본이 교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입국(教育立國)을 정책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사명과 기능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적 자원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국가간 경쟁에서 앞서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식인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력한 사회적 요청을 받고 있는 세계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학이 갖추기 위하여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정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그 중요성이 구두선(口頭禪)에 머물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이 GDP 대비 0.4% 수준이라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안정된 사회, 편안한 국민복지와 산업발전에 대한 세심한 국가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다면 교육의 방향과 정책은 자연스럽게 설정될 것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기본계획과 시행방법을 제시한다면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학제, 교육과정, 학교운영, 학생, 교사, 수업에 이르는 교육의 문제는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병만약(千病

萬藥)이라 했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화두로 삼아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안 또한 문제의 몇 배나 된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국민 그 누구에게도 관심 밖이 될 수 없으며, 모두가 이해관계 위에 놓여 있고,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실로 난마처럼 얽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문제 가운데 대학교육은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학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은, 원래의 교육목표와는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이상과 현실은 완전히 별개일 수밖에 없다. 훌륭한 교사나 좋은 학생을 가름하는 기준은 좋은 대학에의 진학이라는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사교육비이다. 사람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물론 자녀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사회와 나라에 유용한 인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서가 아니다. 사교육의 목적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이른바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를 바라는 일념에서일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웅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서 일탈해도 상관없고, 자녀의 건강썩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뿔어진 경쟁심으로 인격이 훼손되어도 상관하지 않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모로서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자신의 자녀가 그 대상일 때는 아무도 자유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교육문제는 심각하고 꼬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담당부서의 명칭이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다. 이는 교육이 인적 자원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서라는 의미있는 변화이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인력수급을 계획한 후에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좀더 일찍 인적 자원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고 전공을 인가해 주었더라면, 오늘날 대학 문제로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대학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학은 대학대로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대학진학 지원자 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도 적어짐에 따르는 대학제정과 운영의 문제, 학부제와 비인기학과의 문제, 교육시장의 세계화에 따르는 대응책,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문제,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의 문제, 그야말로 대학생존의 문제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이 대학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성되었으므로 해결방법도 정부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통해서만 해결해 왔다. 예를 들면, 대학이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한 적이 없었다. 학제, 교과과정, 학생의 관리 등 대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 모든 학사운영을 대학의 온전한 뜻에 따라 정했던 적도 별로 없었다. 물론 대학의 자율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율에 길들여진 풍토에서 앞으로 우리의 대학이 긴박하게 다가온 몇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II. 무분별한 대학 설립과 증원이 지방대학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고 육성의 활로를 찾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려면 간의 지방대학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에는 문제가 없어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대학 육성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체의 문제로 되어 있다. 이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우리 교육 전체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의 운명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 문제인 것이다.

‘지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학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학의 양적 팽창에 따른 학력수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신분상승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학벌을 중시하는 뿌리깊은 관행 속에서 모든 국민의 염원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많은 대학은 이 같은 국민적 여망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서울에 여러 대학이 설립되었고, 다음에는 각 도마다 대학이 세워졌으며, 이제는 거의 모든 시·군마다 대학이 없는 곳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면 또다른 문제점이 초래되므로 향후 표출될 지방대학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지방대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수적인 증가에 따라 대학 신입생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연구원의 '고등교육체제의 질 관리 현황 과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으로 학생간 학력 편차가 커지고, 특히 지방대의 학력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 대학은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이 설립된 배경에는 대학교육이 사업으로 인식된 측면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설립자들은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체로서 대학을 설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력수급계획 없이 대학을 인가하고 학과를 증설했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야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재정적 기반이 취약했던 과거 정부에서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권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 없이 학생 수만으로 세 과시를 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초·중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학진학 희망자는 많고 대학의 문이 좁았던 시절에는 대학 간판만 달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의 모집정원 수가 대학진학자 수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지만 무분별하게 대학을 설립한 측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난립이 다른 한편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인재가 배출된 것도 사실이다. 만약에 이러한 대학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진학을 위하여 고민하고 방황했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수적인 증가는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대학의 교육수준향상 노력에도 기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대학들은 학생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많은 대학은 존립의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면 또다른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향후 표출될 지방대학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지방대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지방화시대가 지방대학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광복 이후에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사회

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중앙집권의 개발독재기를 지나 민주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분산화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정권의 구호가 됐는가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선거공약이 될 정도로 분권과 지방화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높은 것이다. 우리의 교육문제도 이 같은 사회적 염원에 따라야 할 것임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보내면 서울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지방에 분배하는 관행이 별 저항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에서 번 돈은 다시 지방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지방발전에 써야 한다는 의식이 지방주민들에게는 팽배해 있다. 지방이 버팀목이 되어 서울에서 돈을 벌 수가 있었으니 지방 뭇만큼 지방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키운 인력을 지방에 공급하는 체제로 가지 말고 지방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방에서 교육해서 쓰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분산을 추진했던 정부정책에 따라 기업체들은 값비싼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업체를 대거 옮기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도 자기 고장에 산업체를 유치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적인 부(富)도 이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환영했던 것이다.

정부권력과 기업의 지방분산화는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는 듯하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방소재 산업체나 공공기관 직원 대부분은 가족을 서울에 둔 채 혼자 지방생활을 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인 지방분산화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대형 서비스업체나 기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남아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정부나 주민들은 과거와 같은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행정과 기업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지방주민들의 지방자치의식이 높아져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경북대 박찬석 총장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공화국은 지방의 인재와 돈을 삼키는 공룡이다. 지방은 서울의 하청업체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엘리트들이 지방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돈과 우수인력이 모두 서울로 간다. 우리 인구의 60%가 지방에 사는데, 한쪽으론만 몰리다 보니 서울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이 든다. 금년도 대구의 경우, 수능시험을 본 학생 2만명 중에 7천명이 서울로 갔다. 성적이 좋거나 경제력이 있는 학생은 대부분 상경했다고 보면 된다. 해마다 전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5만 명과 편입생 등 모두 6만 명이 서울로 간다. 이에 따른 비용은 등록금·하숙비 등 1인 당 연간 1천5백60만 원에 달한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직장을 잡기까지는 평균 6년이 걸리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5조6천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셈이다.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두뇌 한국(BK)21' 사업을 시작한 뒤 지방대에 일부 남아 있던 우수 인력마저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서울의 대학원으로 가버렸다. 교수가 연구를 하고 싶어도 도와 줄 대학원생이 없어 경북대는 올해 베트남 학생과 중국 하얼빈대학 학생들을 뽑아 연구 인력을 충원했다."고 하였다.

박 총장의 언급은 양적 팽창에 따른 대학의 위기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방대학의 이 같은 뼈아픈 목소리는 지방주민들의 자각에 따른 지역사회의 요구와 어우러져 이제는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를 우리나라 대학의 큰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화두로 만들어 주고 있다.

Ⅳ. 먼저 인적 자원 양성의 치밀한 계획부터 세우자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수도권 대학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해결하려 해서 안 될 것이다. 수도권의 대학은 수도권의 대학대로, 지방 대학은 지방대학대로 함께 발전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일찍이 都·農간의 균형적인 대학교육발전을 위하여 천안에 지방캠퍼스를 설립한 우리 단국대학교로서는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울캠퍼스는 서울캠퍼스대로, 또 천안캠퍼스는 천안캠퍼스대로 발전계획을 세워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978년 우리 대학이 천안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만 해도 지역의 고등교육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많은 주민들이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들처럼 제대로 된 대학 건물에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가진 대학이 지방에 세워지기를 희망했고, 정부에서는 인구분산책의 하나로 지방에 대학설립을 권장했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시책이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재학생 중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이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한다. 이는 우리 천안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을 지나 중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까지 서울의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지방대학이라 해도 그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 대학의 육성책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육성책은 그 역사가 깊다. 이미 1978년에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주로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억제에 위한 것이었으며, 수도권의 대학신설 억제, 서울의 대

학증원 동결, 지방대의 증과·증원 허용, 지방 국립 대학의 재정지원, 지방분교 권장 등이었다.

1994년에는 대학정원 자율화정책을 시행하였고, 1996년에는 대학설립준칙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설립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 같이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대학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만큼 마땅히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책을 마련하여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아직도 정부에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설대학 인가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정원 정책이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은 정확하고 올바른 인적 자원 계획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적 자원의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분야의 인력을 언제, 얼마나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거의 잘못은 과감히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학입학 지원자의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렵게 된 문제는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났다. 이에 대해서 대학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도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미 설립된 모든 대학과 전공을 그대로 존립시킨 채 발전시키려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대학이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 구조를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장논리라는 비난을 할지 몰라도 잘못된 인력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인력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교육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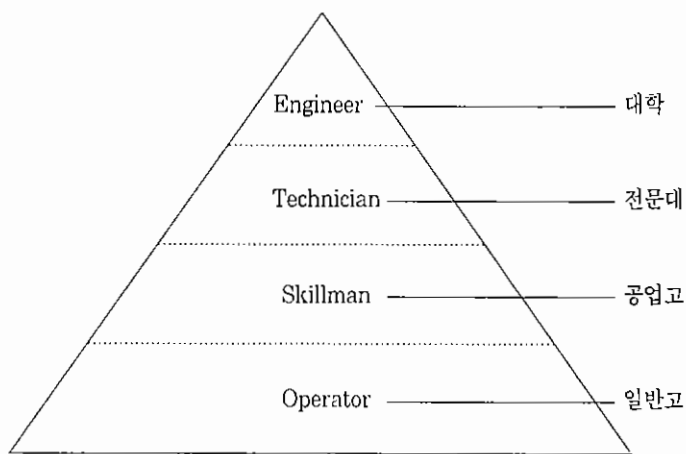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독어독문학과 학생정원이 독일의 독어독문학과 학생정원보다도 많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이 독어독문학 분야에서만인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학계 지원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땀질 식으로 그 문제에만 매달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체 학문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문제해결의 핵심은 지방자치 제도의 확립이다

첫째, 지방대학의 영구적인 육성방안은 지방자치 제도의 확립이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 원인은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의 행정만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을 뿐이며, 경제는 아직도 완전 중앙집권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한 주에 있는 은행과 전력회사 등은 시단위로 분리돼 있다. 예를 들어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Omaha) 시의 한 은행이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려면 그 도시의 다른 은행들과 협약해야만 가능하다. 전문의·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은 발행한 지방 또는 제후지방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은 인구분산은 물론이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정부의 사회요구에 따르는 확고한 인력수급정책의 설정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 많은 교육체제하에서는 기계를 설계하고 공정을 계획하는 기사(engineer)만 너무 많이 육성되고, 기계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operator)는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피라미드형 인력배치도(〔그림 1〕 참조)에 상반되는 것으로,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고급인력은 남아도는 고질적 사회문제를 낳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학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부가 대학의 합병(M&A)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물론 대학의 합병은 입학정원의 대폭감소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수급에 맞도록 전공학생수의 재구성과 새로운 대학의 특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1〕 피라미드형 인력배치도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 원인은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인부의 행정만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을 뿐이며,
경제는 아직도 완전 중앙집권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5년제 전문대학의 육성과 같은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일본과 대만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와 정보화산업에 주력을 하다가 반도체가격의 하락으로 모두 오랜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산업은 첨단산업처럼 기술을 개발하는 데 고급인력과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형태로도 유지 가능하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은 가내공업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이익을 상당히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비단을 독일의 한 중소기업에서 날염한 천의 값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천의 값보다 10배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밀린다고 한다. 고부가가치의 세심한 고도의 기술은 한두 해에 습득할 수 없으므로 중학교 졸업 후에 다니는 5년제 전문대학의 육성이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요구된다. 기사(engineer)나 디자이너(designer)가 아무리 설계를 잘하여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자(skillman)의 능력이 부족하면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없지만, 설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술자의 기술이 완벽하면 설계의 결함을 제거하고 좋은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생산 가능한 기술만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므로 여러 부분에서

기술인력들이 육성된다면 시너지효과에 의하여 기술은 더욱 발전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경제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된 후 빠른 시일안에 안정적인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도 서독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특성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5년제 전문대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기술을 이수한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국민들의 의식구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넷째, 대학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정해진 과정을 이수시켜서 졸업생을 배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산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들을 위하여 대학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과과정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고 실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 교육의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모든 고시,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원 선발,

기업체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입법으로 하되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 대학이나 전공선택에 있어서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나 질(質)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 지역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상당부분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여지가 있어야 한다. 기초학문분야 등의 지역할당과 그 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방대학을 위한 BK사업 같은 것을 실시하여 지방대학의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선 자기지역에 대학이 위치함으로 얻어지는 정신적·경제적 이득이 막대함을 이해하고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여덟째, 지방대학에서 그 지방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이러한 의지가 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기 고장에 생활근거지를 가진 사람 또는 그 지방에서 졸업한 사람이 그 고장의 공무원이나 기업체에 채용된다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제도에서 중앙에 있어야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홉째, 지방대학 육성에 매달려서 수도권대학의 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계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아직도 우리는 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의 대학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영**

이용우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Nebraska-Lincoln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국가기술고등고시 시험위원, 대학출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